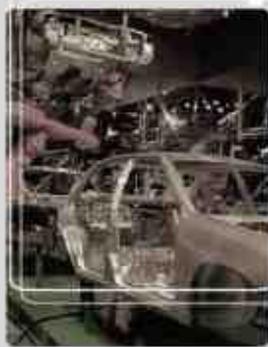


프랑스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및 동향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주요 분야별 정책 분석과 기대효과 및 전망 / 3

- | | |
|----|------------|
| 3 | 1. 재정 및 조세 |
| 5 | 2. 교역 |
| 7 | 3. 유럽재정위기 |
| 10 | 4. 기타 이슈 |

II. 시사점 / 12

- | | |
|----|----------------|
| 12 | 1. 수출 전망 |
| 13 | 2. 투자진출 전망 |
| 13 | 3. 투자유치 전망 |
| 14 | 4. 기회요인 및 활용전략 |

요 약

I. 주요 분야별 정책 분석과 기대효과 및 전망

분야	주요 내용	기대효과/전망
재정 및 조세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확대	인프라 확충에 따른 건설관련분야 장비 수요 증가
	부가가치세 인상(19.6→21.2%) 법 폐기	물가 상승이 우려되었으나, 폐기가 유력
	변동유류세 도입을 통한 유가 안정 도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나, 도입 시 자동차 및 관련 산업분야 회복, 우리 제품 수출 확대 가능
	부유층 소득세율 및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다국적기업, 대기업의 구조조정, 생산시설 해외이전 우려
교역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 대폭 확대 예상
	산업/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프랑스 기업을 우선시하는 보호주의적 정책 가능
재정위기	新재정협약 재협상	실물경제 성장과 재정적자 축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으로 발전
	유럽연합 산하 금융기관 역량 강화	긴축과 성장 달성을 통한 재정위기 해결책에서 핵심역할 기대
	금융거래세 도입	단기 투기세력 난입 방지, 세수 확대 효과
	유로본드 도입	유로존 공동 채권 도입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
기타	원자력 에너지 비중 축소(75→50%)	신재생 에너지 등 수급원 다양화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 조기 철수	우방국가와 외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실천이 어려울 전망

II. 시사점

구분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분야의 수입 수요는 침체국면이나 항공우주, 명품, 일부 IT는 수요가 꾸준한 편 · 건축 일변도에서 성장도 갈수록 강조되고 있어 내수 진작에 따른 수입 수요에 긍정적 영향 예상
투자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수요 둔화와 세금 인상 공약 등으로 투자진출 위험도 증가 · 자금난에 직면한 프랑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진행형 투자는 유지하되, 신규 프로젝트는 유보 가능성 · 신정부의 조세정책으로 프랑스 대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 전망. 투자지로서 한국의 장점 홍보가 중요
기회요인/ 활용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FTA 활용 위해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를 바이어에게 홍보 · 자금난에 직면한 현지 기업 인수에 대한 M&A 검토 필요

I 주요 분야별 정책 분석과 기대효과 및 전망

1. 재정 및 조세

□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확대

○ 내용

- 광케이블을 비롯한 전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 서민주택 건설 비중 현행 20%에서 25%로 확대
- 파리시 및 인근 지역 교통망 확장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

○ 추진요건

- 일정 수준의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세수 추가 확보 등 재원확보 및 재정적자 심화 방지 대비책 마련

○ 전망 및 시사점

- SOC, 주택 등 건설 부문 경기 활성화 및 해당 기업 투자 증가, 일자리 창출 기대
- 인프라 구축 관련 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 기자재 및 관련 부품 수요 증가로 인한 수입 확대 전망

□ 부가가치세 인상법 폐지

○ 내용

- 2012년 10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부가가치세 정상세율 인상 법 폐기 (현행 19.6%→21.2% 인상)

○ 추진요건

- 사르코지 행정부에서 입법된 정책으로 올랑드 대통령 당선에 따라 무효화 될 것으로 전망
- 오는 6월 총선 후 하원과 상원에서 동 법 무효화 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당을 비롯한 좌파가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 폐지 유력

○ 전망 및 시사점

- 프랑스 기업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고용주세를 낮추는 대신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충당하려던 정책으로, 관련 법률 폐지시 새로운 물가 상승 요인 해소
- 한국산 제품 가격을 포함한 상품가격 상승 등 우리 수출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었으나 폐기가 유력시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 기대

□ 변동 유류세 도입을 통한 유가 안정 도모

○ 내용

- 당선 후 3개월 동안 휘발유 가격을 동결하고 국제 유가에 따라 유류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변동 유류세 제도를 도입, 물가 안정 도모

○ 전망 및 시사점

- 과거 사회당 정부 시절 시도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
- 대선 이후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내림세를 타고 있어 더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전망
- 성공할 경우에는 침체된 자동차 및 관련 산업 수요 회복을 비롯해 해당 분야 우리 제품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부유층 소득세율 인상, 다국적기업 및 대기업 법인세율 상향 조정

○ 내용

- 연간 1백만 유로 이상의 부유층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75%로 인상하며, 상속세 감세한도 축소 추진
- 특히 거대 다국적기업 및 대기업에 부과되는 명목 세율을 현행 33.33%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초영세기업의 세율을 각각 30%, 15%로 인하 추진

○ 전망 및 시사점

- 선거 운동 당시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 실제 적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며, 실현될 경우 추가 세수확보 가능
- 반면 부유층에 대한 세수부담이 증가하면서 국적 변경을 통한 조세 회피, 조세 피난처 활용 등의 역효과 우려
-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조세 부담 증가로 구조조정, 생산시설 해외 이전에 따른 고용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 상존

2. 교역

□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 내용

- 중소기업 전용 은행, 기금 신설 혹은 확충을 통한 지원책 강화를 바탕으로 유망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 추진요건

- 기존의 중소기업 자금 대출, 신용 보증 등의 역할을 수행한 기관¹⁾간의 역할 분담 및 권한 명확화 필요

○ 전망 및 시사점

-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저하, 특히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됨. 중소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산업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 내용

- 2011년 무역적자 최고치 경신(696억 유로) 등, 국가 수출경쟁력 저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 분야 정책 수정 필요성 대두

○ 전망 및 시사점

- 고비용 구조로 인해 생산시설 해외 이전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확대되고, 이는 실업률 상승과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
- 유럽재정위기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은 가운데 제조업 회생,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 재검토 전망
- 프랑스 기업을 우선시하는 보호주의 성향 강화 예상

1) OSEO(프랑스 중소기업 기술평가·보증 금융기관), Coface(프랑스 무역보험기관) 등

3. 유럽재정위기

※ 좌파 대통령 취임에 따른 유럽재정위기 향방

□ 성장과 긴축을 다 잡기위한 정책 추진

- 재정위기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경제성장이 수반되지 않은 긴축 정책은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어, 경기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건설 부문 국책사업들이 활성화되어 경기회복의 원동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EU 경제·산업 구조 전면 개혁 필요

- 재정위기로 인해 EU 경제통합 및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대두
- 단일화폐 사용만으로 EU 경제통합이 완성될 수 없으며 재정통합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
- 재정위기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회원국들의 경제·산업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

□ 독일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는 필수 조건

- 올랑드 신임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사르코지 전 대통령 시절과 같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관건
- 新재정협약 개정, 유로본드 도입, 유럽중앙은행 역할 수정 등 주요 이슈에서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향후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 낼지가 초미의 관심사
- 독일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그리스 사태 해결 여부가 올랑드 대통령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첫 번째 평가로 작용할 전망

□ 新재정협약 재협상

○ 내용

- 유럽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EU 회원국 헌법에 2017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명기토록 한 협약
- EU 국가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국가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할 경우 벌금 등 EU 차원의 제재 시행
- 올란드 대통령은 경제성장이 없는 긴축재정만으로는 재정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동 협상에 경제성장 방안을 포함시키는 등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 추진요건

- 프랑스측 재협상 요구에 독일은 신재정협약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고수
- 다만, 긴축재정을 통한 균형재정 목표는 유지하되 EU내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는 부분은 유동적

○ 전망 및 시사점

- '12.5.15일 취임 직후 프랑스-독일 정상회담 및 5.23일 비공식 EU 정상회담에서 성장을 위한 방안 협의했으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결정은 6.28~29일 개최될 공식 정상회담으로 미뤄짐.
- 일부 회원국 유력 인사들,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이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주요 의제로 대두될 전망
-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성장과 재정적자 축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시에 달성, EU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

□ 유럽연합 산하 금융기관 기능 강화

○ 내용

-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유럽투자은행(EIB) 등, EU 차원의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재정 안정성 제고

○ 추진요건

- 독일을 비롯한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특히 ECB의 역할 수정과 관련하여 독일이 독립적 지위 보장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어 공식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 전망 및 시사점

- 유럽투자은행 기금이 증액되고 해당 기금이 역내 건설,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지원에 투입될 경우 고용창출, 경기 활성화 등,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

□ 금융거래세 도입

○ 내용

- 주식과 채권의 경우 거래금액의 0.1%, 파생상품의 경우 0.01%를 과세, 무분별한 금융시장 투기 억제 및 세수 확대 추진

○ 추진요건

- 유럽집행위에서 이미 안을 마련하였으나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7개 국가는 찬성하는 반면 영국과 스웨덴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오는 6월 말 EU 정상회의에서 타협이 필요

○ 전망 및 시사점

- IPO 및 채권발행시장(primary market)은 해당되지 않는 점과 오늘날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신용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그 여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우려
- 다만, 무분별한 단기 투기세력의 난입을 방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유로본드(Eurobond) 도입

○ 내용

- 유로존 회원국 공동 명의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재정위기 발발 이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 전망 및 시사점

- 유로존 위기국가들로 야기된 문제를 다른 회원국들이 떠안는다는 전제조건에 대해 독일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급진적인 방향 선회가 없는 한 단시일 내 도입은 어려울 전망
- 절충안으로 올란드 대통령은 특정 인프라·산업 프로젝트에 한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이른바 "프로젝트 채권(project bond)"을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독일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

4. 기타 이슈

□ 원자력에너지 비중 축소 및 기존 원자력 발전소 안전 강화

○ 내용

-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행 75%에서 2025년에 기준 50%로 축소
- 낙후 원전 폐쇄를 통해 후쿠시마 사태로 불거진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신뢰 회복

○ 추진요건

- 원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휘발유 소비 감소가 두드러진 현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는 에너지 가격 상승 부채질
- 따라서 동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제 유가, 휘발유 소비자가격 안정 등 선행이 필요
- 원자력 비중 축소 분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 전망 및 시사점

- 환경 보존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에 따라, 프랑스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 (2010년 약 12% 차지)
- 과잉생산과 정부지원정책 중단으로 침체된 태양광 발전 산업의 재도약 기반이 조성되고,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추가 발주될 것으로 기대
- 장기적으로 원자력 에너지 안전성에 대한 우려 해소 등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 조기 철수

○ 내용

- 2014년 말로 예정된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 2012년 말까지 조기 철수

○ 전망

- 물리적으로 3,400여명의 병력과 장갑차, 전투기 등의 장비를 2012년 말까지 철수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
- NATO 내에서 프랑스 입지 약화는 물론, 주요 우방국과의 정치적, 외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실천하기 어려울 전망

II 시사점

1. 수출 전망

□ 프랑스 시장 수입 수요 회복 여부

- 제품별로 격차가 큰 편이나 항공우주, 명품산업, 일부 IT제품을 제외한 상당수 분야의 수입 수요는 침체 국면
- 올랑드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강조하며, SOC 프로젝트 추진도 공약함에 따라 내수 진작을 통한 수입 수요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전망
- 기존 거래 바이어 혹은 타겟 바이어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상대 기업의 구매 전략 추이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

□ 프랑스산 혹은 유럽산으로의 수입선 전환 움직임 주시 필요

- 재정위기 발발 후 무역관이 접촉한 바이어 상당수가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외국산보다는 국내산 또는 역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는 입장 표명
- 유럽산 제품과 직접적인 경쟁에 놓인 우리 기업은 수출마케팅 전략에 반영하는 등 대비가 필요

□ 2012년 수출 증가는 쉽지 않을 전망

- 1분기 대프랑스 수출은 66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 기록
- 2011년 1월, 20억 6,500만 달러 상당의 대형해상구조물(FPSO)²⁾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로 대폭 감소가 불가피

2)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부유식생산저장설비)

- 2011년도 대프랑스 수출 기저효과 외에도 프랑스 내수 회복이 불투명하고 EU 상품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어, 올 한해 대프랑스 수출 감소와 이에 따른 무역적자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2. 투자진출 전망

□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투자진출 리스크 평가

- 현지 진출 기업 또는 진출 희망 기업의 경우 현지 수요 둔화에 따라 공격적인 투자진출을 통한 비즈니스 확대에는 신중 필요
- 부가가치세 인상법률 폐지 공약 무산 가능성,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 증가 전망 등은 투자 위험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

□ 일부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기회로 활용

- 자금조달에 큰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면, 현 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공격적인 행보 구축도 중요
 - 경기부양책 축소와 시중은행의 대출 요건 강화로 상당수 프랑스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어, 적극적인 신제품 개발과 제품 프로모션이 어려운 상황

3. 투자유치 전망

□ 현재진행형 투자는 유지, 신규 프로젝트는 유보

- 자금조달원이 다양한 다국적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기존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중견기업이나 자금조달처를 다각화하지 못한 중견기업의 경우 신용 경색이 해소되기 전에 프로젝트를 유보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신규 프로젝트 추진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

□ 신정부 대기업 관련 정책 추진에 관심

- 올란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및 프랑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 국내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시설 이전 및 해외 투자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있어 투자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심분 강조할 수 있는 프로모션 활동 역시 중요성 증가

4. 기회요인 및 활용전략

□ 한-EU FTA 적극 활용

- FTA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을 통해 바이어 인지도 제고 필요
 - 동 협정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를 일찌감치 판매 증대나 기업 마진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 관심 기업들도 있는 반면, 이를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바이어들도 상당수
 - 한-EU FTA를 통해 우리 제품의 품질이외 가격 측면에서의 매력도를 심분 어필한다면 새로운 판로 개척 가능

□ 자금난에 직면한 현지 기업 인수도 지름길

- 재정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일부 경쟁력 있는 현지 기업이 신용경색으로 자금난에 직면했다는 점도 우리가 현지 판매량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 가능
- 따라서, 프랑스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 인수를 통한 진출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끝/



작성자

- ◆ 파리무역관 이연주 과장
- ◆ 선진시장팀 진은주 대리



Global Market Report 12-007

프랑스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및 동향

- 발행인 | 오영호
- 발행처 | KOTRA
- 발행일 | 2012년 5월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 전화 | 02) 3460-7114(대표)
-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